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년 4월 20일(수) 14:00
배포일시	2022년 4월 20일(수)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겸 미래전략연구센터장 (044-550-4011, yskoh@kdi.re.kr)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 일 시: 4월 20일(수) 13:30 ~ 18: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KDI는 4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
 - 미중 전략경쟁, 팬데믹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디지털 경제 심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난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의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
-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KDI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원년을 맞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통해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이달 출범시켰다”며 “향후 연구 협력플랫폼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경제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힘.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는 어떤 미래가 도래할지, 그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학계나 정책집단에서 미래연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컨퍼런스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즈음해 국가미래전략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언급함.
-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1년간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지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부터는 임기 5년을 넘어 이후 정부에서도 15년, 20년간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속가능성장을 담보하는 일관된 국가전략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밝힘.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은 공간 찾기와 같으면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얽혀있어 정책을 실행하면 승자도 있지만 패자도 생긴다. 학술연구자들은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의미를 두겠지만, 정책연구를 하는 KDI는 전체 후생의 배분에까지 관심을 가져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함.
- [기조세션.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에서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 3만불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성장엔진의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를 제시
 - 또한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를 들며, 파트너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의 혁신과 시스템·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스마트 정부의 출현을 피력하고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이며, 과거를 넘어 미래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제언

- [세션 1. 새로운 도전과 과제]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난 3월 17, 18일 양일간 경제전문가 518명, 일반국민 1천 명이 응답한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새 정부의 국정 최고목표로 꼽았고,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경제성장과 분배’를, 단기적인 역점 추진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로 미중 갈등, 산업정책의 부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불평등 확대 등을 화두로 제시
 - 특히 미중 간 체제 및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포괄적 보호주의 등장에 이어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에 따른 환경변화와 국제협력에 대해 각성할 시점이라고 언급

- [세션 2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온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
 -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추진 체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며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적극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 집중이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
 -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혜택은 키우되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2030년 이후 고령층 인력활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점진적인 정년연장이 추진돼야 하지만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직무 설계와 직무급 확산은 물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촉진을 비롯한 세대 간 상생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중장년층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가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양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앞으로는 질적 격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이를 위해 광역권 내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

-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기존 소득지원도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지적
 - 향후 일자리 변화가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나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득지원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 [종합토론]에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논의에 참여함.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 첨부 3. 연사 프로필
- ❖ 별첨 1. 컨퍼런스 현장 사진(20일 14시 배포 예정)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13:50	개회식 개 회 사 홍장표 KDI 원장 축 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13:50~14:20	기조세션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기조연설 진념 前 경제부총리
14:20~14:30	휴 식
14:30~15:00	세션 1.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발 표 1. 국가미래전략: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발 표 2.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15:00~16:15	세션 2.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 표 1.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발 표 2.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발 표 3.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방향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발 표 4. 거점형 지역발전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발 표 5.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16:15~16:40	대국민 질의응답
16:40~17:00	휴 식
17:00~18:00	종합토론 좌 장 주 현 산업연구원장 토 론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윤중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성장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 첨부 2. 연사 프로필

개회식

개회사

홍장표 KDI 원장



- 現 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 前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축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前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 現 국회미래연구원장
- 前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 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장,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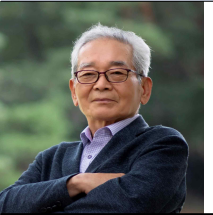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 現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 前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前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英 에식스대학교 교수

기조세션.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진념 前 경제부총리



- 前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 前 기획예산처 장관
- 前 기아그룹 회장
- 前 노동부 장관
- 前 동력자원부 장관

세션 1.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발표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現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現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
- 前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 前 KDI 부동산연구팀장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現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現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前 KDI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前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세션 2.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 표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現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現 GVC 재편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現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
- 前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 前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前 한국은행 차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 現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 現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
- 現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前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現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現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 現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포럼 위원
-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사회대응연구회 위원
- 前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TF 위원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現 KDI 연구위원
- 現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現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 前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

종합 토론

주현 산업연구원장 (좌장)



- 現 산업연구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
- 前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前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장
- 現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 現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경제통상분과 위원장
- 現 청와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 現 한국APEC학회장

장윤중 前 포스코경영연구원장



- 現 KDI 초빙연구위원
- 前 포스코경영연구원장
- 前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
- 前 한국국제통상학회장
- 前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 부원장 등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現 美 NBER Research Economist
- 前 美 UCLA 방문교수
- 前 美 뉴욕주립대학교(빙햄턴) 경제학과 조교수
- 前 美 시카고대학교 인구경제학연구소 연구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現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前 국회미래연구원장
-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개혁팀장
- 前 KDI 부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촌사회분과 위원
- 前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 前 보건복지부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

성창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 現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 前 홍콩총영사관 재경관
- 前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 前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 첨부 3. 세션별 발표 요약문

[기조세션]

기조연설.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진념 前 경제부총리

- 글로벌 패권경쟁, 팬데믹과 환경 위기 등 대전환기 속의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 하락, 고용사정 악화 및 소득 불균형, 주력산업 경쟁력 위협, 서비스 산업 진입 규제, 경제의 정치화로 경제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
- 소득 3만불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성장엔진의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를 제시
 - '공정·규율의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는 동시에 공정경쟁의 질서를 준수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
 - '성장엔진의 확충'은 기술과 브랜드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확장하고, 물류·의료·문화·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대비하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집중 지원하는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가능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안정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가면서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출산·보육·육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함.
 -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의식·가치를 정립하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사회적 신뢰 구축, 기득권의 절제와 자기헌신이 요구됨.
- 특히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은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라고 판단, 파트너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의 혁신과 시스템·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스마트 정부의 출현이 이뤄져야 함.
-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정부와 시장 간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중재자이자 플랫폼으로 기능. 정책적 전환기에 정책대안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그 위상과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세션 1.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발표 1. 국가미래발전전략: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KDI는 지난 3월 17, 18일 양일간 국가미래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전반에 대한 경제전문가 518명, 일반국민 1,00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

-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 최고목표의 주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또는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경제전문가 46.9%, 일반국민 29.2%),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경제전문가 32.2%, 일반국민 22%),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경제전문가 4.6%, 일반국민 22%)

- 국정 최고목표 하에서 단기적 역점 추진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희망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자생력 강화'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발표 2.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글로벌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각국은 그에 따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미중 갈등) 미중 간 체제 및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포괄적 보호주의 등장에 이어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까지 진입 → 우방국 간 공급망 혹은 탈중국 공급망이 단기간 내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미중 경쟁에 대한 환경변화 인식과 국제협력에 대한 각성이 필요
 - (산업정책의 부활) 미중 갈등에서 촉발된 공급망 정책은 EU, 일본 등에서도 특정 첨단산업을 지정해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확산 → 첨단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안보 정책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기존 대외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할 필요
 - (기후대응) 기후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과 실행 점검이 최우선 순위 아젠다로 부상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공투자 및 산업전환 전략방안을 모색
 - (디지털 전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데이터·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변화된 일·소비 방식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전망 → 미래형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개발 등과 더불어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율,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통제가 필요
 - (불평등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는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세션 2.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1.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기시 돼온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양상
- 한국 경제는 중장기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며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할 필요
 - 특히 첨단산업 기반 인프라를 적시에 제공해 제조기반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함.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자원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탄소중립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탈탄소의 핵심기제인 효율적·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함.

발표 2.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구글,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플랫폼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적극 제기됨.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여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플랫폼 기업의 위상과 영향력 증가로 각종 논란이 발생
- 디지털 플랫폼의 혜택은 키우되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일관적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함.
 - (경쟁정책 재정비) 현 경쟁법 규율체계에서 유연성·신속성을 높일 필요
 -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공익보호, 사회후생 극대화 원칙을 적용
 - (데이터) 데이터 공유 유인 제공 및 데이터 활용의 규제부담 완화, 데이터 표준화 노력, 개인정보 보호와의 절충
 -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 디지털 플랫폼이 전면에 등장하고 다각화됨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 설계 필요성이 대두
 - (플랫폼 노동)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이해와 보호방안 설계 논의

발표 3.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방향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향후 고령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20년 15.7%에서 2050년 40.1%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인구 부양비가 2020년 21.8에서 2050년 78.8에 도달할 전망
 - 출산률 제고, 이민 정책 등의 중요성도 높지만, 2030년 이후로는 고령층 인력 활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점진적 정년연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만,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현 상황의 정년연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고령층 일부의 고용을 연장하지만 청년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됨.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직무 설계와 직무급 확산과 함께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정년연장을 충분히 유도해야 할 것이며,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촉진을 비롯한 세대 간 상생정책 지원이 병행될 필요

- 디지털·저탄소 전환까지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한국의 노동자는 주요국에 비해 업무의 정형성이 높고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가 시급
 - 교육투자 재원배분을 인구구조 비례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시장성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발표 4. 거점형 지역발전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는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양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앞으로는 질적 격차에 중점을 둘 필요
 - 2019년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를 시작한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이후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섬.

- 광역시도 간 소득격차는 활발한 인구이동으로 점차 완화됐으나, 인구이동이 정체됨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활발히 이동하며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완화됐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남.
 -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 간 인구이동 정체를 고착화하며, 향후 소득격차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광역권 내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
 - 집적경제는 도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혁신을 일으키는 근원이며, 주변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
 -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광역권의 협력이 필요

발표 5.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코로나19 위기로 현 사회안전망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향후 발생가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 밖에 있었으며, 기존 소득지원도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실제로 현 소득보장체계는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해 근로연령층을 지원하는 경기대응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관찰됨.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
-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소득지원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근로연령층은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해 정상 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
 - 소득지원의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대상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강화
 - 또한 주거, 교육, 돌봄 등 필수적인 욕구에 대한 현물·사회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